

# 적정기술과 사회적 기업 어떻게 만날 것인가: 국제개발학의 관점에서

김 현 주

영국 버밍엄대학교 국제개발대학원

Appropriate technologies have drawn increasing attentions as alternative ways to tackle global poverty, but innovations to get them to the poor who benefit from are still lacking. This article aims to examine innovations in appropriate technology dissemination by focusing on social enterprise that delivers basic services such as health, education, sanitation and electricity to the community. In particular, the study identifies three types of social enterprise models for appropriate technology dissemination which can incorporate with development efforts in general. These are social enterprises that (1) provide appropriate technologies which facilitating income generating activities for the poor (2) support community-led development initiatives rather than deepen dependency on external aid and (3) catalyze micro and small enterprises development in a sustainable way. Whereas these potentials, however, it needs be aware that social enterprises have risks to exclude the poor or the poorest who are not able to afford to commercial-based services. Thus, there is a need to put pro-poor perspectives at the centre of appropriate technologies dissemination, and carefully decide whom we are targeting and why.

## 1. 들어가며

개발도상국의 빈곤 완화 및 지속가능한 발전을 촉진하는 적정기술에 대한 관심이 깊어지면서 이에 대한 빈곤층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혁신의 한 방법으로 사회적기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 글은 사회적기업을 통한 적정기술 보급에 대한 관심이 글로벌 빈곤 이슈에 대응하는 해외 사회적 기업의 성공 사례를 단편적으로

소개하는 데 그치고 있다는 데에서 출발한다. 소농을 위한 적정기술인 페달형 소형관개펌프 머니메이커 (Money Maker)를 개발하여 빈곤층에 판매하는 킥스타트 (KickStart) 등이 적정기술 사회적기업의 모델로 자리잡고 국내외의 주목을 받지만, 이를빈곤 완화 및 감소, 사회적 소외 및 불평등의 완화를 목표로 하는 국제개발 (International Development) 또는 국제개발학(International Development Studies)의 맥락에서 이해하려는 노력은 부족한 실정이다. 이 글은 국제개발학의 흐름 속에서 사회적기업을 통한 적정기술 보급이란 주제가 어떻게 검토될 수 있는지 살펴봄으로써 앞으로의 논의에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 2. 적정기술과 사회적 기업; 국제개발학의 맥락에 놓기

적정기술과 사회적기업의 만남을 살펴보기에 앞서, 국제개발학 담론 내에서 두 주제가 어떻게 사유되고 있는지를 먼저 고찰할 필요가 있다. 이는 두 주제를 각각 기술 혹은 비즈니스 방법론으로 개별적으로 검토하는 데에서 나아가, 개발도상국의 빈곤 완화, 감소 및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맥락 속에서 고찰하기 위한 첫번째 단계가 될 것이다.

### 2.1 적정기술

1960년대 이후 개발도상국에 적정기술을 보급하려고 했던 움직임은 1) 개발도상국의 열악한 제반 시설을 고려해 비용과 기술 수준이 낮은 중간 기술을 전수하려 했던 기술 이전 원조와 2) 1960~70년대에 걸쳐 서구에서 일어난 신좌파, 반전, 환경운동의 영향으로 산업사회와 기술의 관계를 근본적으로 성찰한 활동가들이 자신들의 이상(‘인간의 얼굴을 한 기술’)을 서구뿐만 아니라 개발도상국에서도 보급하고자 펼친 일련의 운동으로 정리할 수 있다. 반면 오늘날 개발도상국에서 빈곤 완화 및 개발을 위해 필요로 하는 기술은 과거 적정기술이 지칭했던 중간기술에 국한되지 않는다. 빈곤층도 접근할 수 있도록 태양광 및 수력 에너지 설비의 가격을 대폭적으로 낮춰 줄 하이테크도 필요하며, 농촌과 도시의 거리를 좁혀 빈곤층의 시장접근성을 높여줄 정보통신기술도 필요하다. 따라서 ‘적정기술(Appropriate Technology)’이란 용어를 1960-70년대의 유산으로 기억하는 국제개발학의 입장에서는 낮은 산업 기술과 농촌 사회를 낭만화하는 수사로 축소되어 이해될 수 있는 ‘적정기술’이란 용어는 빈번하게 사용되지 않는다.

그 결과 국제개발학 저널에서 ‘적정기술(Appropriate Technology)’를 검색하면 최

근에 씌어진 논문은 찾아보기 어렵다. 대신 그라민폰(Grameenphone), 수동형 관개농기구, 에너지 절약형 스토브, 태양열을 이용한 정수 장치 등 우리가 적정기술로 주목하는 내용들은 농업, 보건, 정보통신(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 ICTs), 에너지 빈곤 등을 다루는 섹터럴 어프로치 아래서 다뤄진다. 이들은 ‘적정기술’로 묶여 불리지 않으며, ‘적정기술’이란 개념 아래에서 포괄적으로 논의되지 않는다. 대신 이들 기술은 개발도상국의 빈곤층이 직면한 사회경제적 제약 (예, 농촌 지역의 에너지 빈곤, 여성의 가사노동부담, 소농을 중심으로 한 농업 생산성의 부족, 시장통합의 미흡함 등)을 완화하고 빈곤 감소 및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방법으로 특정 사회의 컨텍스트 속에서 논의된다.

이는 국내에서 추진하는 적정기술 보급 사업과 국제개발학에서의 기술에 대한 접근이 그 지향을 같이 함에도 불구하고, 국내의 노력들이 적정기술이란 용어를 강조함으로써 그 결과 국내외의 관련 국제개발협력 사업과 적절히 통합되지 못하거나, 기존 프로그램의 성공과 실패에서 배우지 못하고 시행착오를 되풀이 할 가능성이 있음을 함의한다.

예를 들어, 에너지 효율형 스토브 보급은 나무 땔감 사용을 줄여 빈곤층의 에너지 부분 가계 지출 부담을 줄이면서 환경 또한 보존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1987년 발행된 브루트란드 보고서(The Brundtland Report)를 통해 지속가능한 발전(Sustainable Development)이 국제개발협력의 주요 패러다임으로 자리잡은 이후부터 빈곤 완화와 지속가능한 발전(Poverty Reduction and Sustainable Development)이란 주제 아래서 꾸준하게 다뤄져온 주제이다. 에너지 효율형 스토브를 ‘적정기술’로 특별히 지칭하지는 않았지만, DFID(the Department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영국 정부 국제개발부), SNV(Netherlands Development Organisation; 네덜란드 정부 산하 국제개발 기구), GTZ(Deutsche Gesellschaft für Internationale Zusammenarbeit; 독일 기술 협력 공사) 등의 국제개발협력 기관 등이 지난 20여 년간 관련 프로그램을 진행해왔고, 이에 더해 최근에는 UN Foundation, USAID(The United States Agen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미국 정부 국제개발처), Sell Foundation 등이 주축된 민관협력 프로그램인 The Global Alliance for Clean Cookstoves까지 활발한 사업을 펼치고 있다.

이와 관련한 국제개발학 연구는 기술의 도입에 따른 여성의 성역할 변화, 빈곤 및 불평등 완화 효과, 시장가격 책정을 통한 기술 보급의 효과성 및 이로 인한 극빈곤층

의 기술 소외 여부 등을 주요 주제로 다뤄왔다. 국제개발학 분야의 주요 서지 엔진인 BLDS (British Library for Development Studies)에 따르면 나무 펄프 사용 및 스톱브 관련 기술의 사회경제적 효과를 다룬 연구가 249건에 이른다.<sup>1)</sup> 이와 같은 연구는 ‘적정기술’을 주제로 해서 접근할 수 없지만, 국내에서 추진하는 적정기술 보급 사업이 빈곤완화 및 발전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참고해야 할 것들이다. 이는 적정기술 보급 사업이 빈곤의 다양한 측면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에 근거하여 진행되기 위해서 요구되는 부분이다. 다시 말해, 적정기술 보급에 있어 적정기술이란 용어 혹은 특정 기술이라는 ‘해결책’ 보다는 에너지 빈곤 및 환경 보존 등의 ‘문제’에서부터 출발하는 시각이 필요하며, 이를 특정 지역의 구체적 사회경제적 맥락 속에서 이해하려는 노력이 요구된다 하겠다.

## 2.2 사회적기업

최근 들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사회적기업 (Social Enterprise)에 대한 주목은 전통적인 국제개발기관 및 NGO 등이 주축이 된 국제개발협력 노력과는 차별적으로 빈곤 문제에 대응하고자 하는 서구의 자선형자본주의(philantropiccapitalism)<sup>2)</sup> 및 최하위계층을 원조의 수혜 대상이 아닌 고객으로 바라보고 이들의 요구에 대응하고자 하는 비즈니스 전략 (the bottom of the pyramid)<sup>3)</sup> 등으로부터 새롭게 높아지고 있는 관심에 힘입은 바 크다. 반면 이들이 사회적기업과 연관지어 관심을 갖는 분야들은 국제개발학의 틀에서는 전통적으로 (1) 소규모 비즈니스(Micro and Small enterprises, MSEs) 개발 및 (2) NGO 혹은 주민조직 (Village Organiozations, VO)을 통한 교육, 보건, 식수 및 위생 등 기초 서비스 보급이란 측면에서 다루어져왔다.

첫째, 서구 선진국에서는 사회적기업 및 사회적기업가 정신을 이윤극대화를 최우선으로 하는 기업 활동과 대조되는 가치로 이해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국제개발학에서는 개발도상국에서의 어떤 기업활동이 이윤극대화를 최우선으로 추구하는가 혹은 사회적 효과를 가져오는 것에 최우선하는가에 대한 논의보다는 성장과 발전의 기본 단위가 되는 소규모 비즈니스(MSEs)들을 어떻게 촉진할 것인지에 보다 근본적인 관심사를 둔다. 이는 시장 통합의 미흡함과 도로, 전력 등 인프라의 부족으로 인해 거래비용이 높고, 고객의 가격부담력이 낮은 상황을 혁신적으로 극복하고 저렴한 가격에 서비스를 공급함으로써 빈곤층의 수요를 충족시키는 기업 활동이란 점에서 선진국에서 정의하는 사회적기업가 정신과 부합하지만, 이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기업가

정신의 강조뿐만 아니라 선진국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인프라를 확충하고 금융, 기술, 법적 정비 등을 개선하여 소규모 비즈니스들이 직면한 제약(constraints)을 해결하고 빈곤층을 기업의 핵심 활동 (생산 및 유통)에 참여하도록 하는 보다 포괄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따라서 국제개발학에서는 이런 노력을 사회적기업에 한정하지 않고 보다 폭넓은 소규모 비즈니스(MSEs) 개발(Business Development Services, BDS)의 틀 속에서 다룬다.

둘째, 사회적기업과 관련지어 이해되는 비용 회수(Cost Recovery), 사용자 부담 요금(User fee), 인센티브(insentive) 등의 비즈니스 접근 등은 1980년대부터 특히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국가들에서 널리 시행된 구조조정책(Structual Adjustment Programmes)과 더불어 긴 역사를 가진다. 1980년대를 거치며 구조조정에 직면한 개발도상국 정부들은 교육, 의료, 상하수도, 에너지 등의 기초 서비스에 대한 공공예산을 삭감하면서 이에 대응하여 서비스 공급의 지속성을 확보하고 민간 부분의 투자를 활성화 하고자 이와 같은 비즈니스 접근 (Business Centered Approach)을 도입해왔다. 한편 정부를 보완해 기초 서비스 공급을 맡아온 국제개발협력 NGO도 효율성, 확장성, 지속가능성의 한계에 부딪치면서 이를 개선하기 위한 한 방법으로 비즈니스 접근을 늘리는 추세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은 비즈니스 접근이 공공 서비스 공급의 효율성 및 지속가능성 강화를 목표로 하지 그 자체로 기업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기초 서비스의 공공성은 여전히 우선으로 강조되는 개념이며, 따라서 기초 서비스 확산을 위한 민간 영역의 참여와 비즈니스 접근을 늘리는 한편 이 과정에서 빈곤층(the poor) 및 극빈곤층(the poorest of the poor) 이 이런 흐름에서 소외당하지 않도록 기초 서비스에의 보편적 접근권을 보장하고 이들을 보호하는 것 또한 국제개발학의 주요 과제가 된다.

이와 같은 맥락에 대한 이해는 우리가 적정기술 보급의 한 방법으로 검토하는 사회적기업을 외부 혹은 선진국의 시각에서가 아니라 개발도상국 빈곤 지역 현지의 사정에 근거하여 바라보도록 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이 관점은 (1) 사회적기업 및 비즈니스 접근을 통한 교육, 보건 등의 기초 서비스 보급이 빈곤층이나 극빈곤층을 대상으로 하기 보다는 그보다 경제적으로 좀 더 나은(the better off but not wealthy) '고객'을 대상으로 함으로써 빈곤층을 소외시키지는 않는지 (2) 특정 방식의 사회적기업이 개발도상국 현지로부터의 소규모 비즈니스 (MSEs) 발전이라는 보다 큰 목표에 얼마나 부합하는지 등을 비판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시야를 넓혀준다.

### 3. 적정기술과 사회적 기업: 국제개발학의 흐름 속에서 길찾기

이 장에서는 앞에 논의한 국제개발학의 흐름을 바탕으로 사회적기업을 통한 적정기술 보급의 가능성을 다음 3가지 유형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 3.1 소득창출을 촉진하는 적정기술을 보급하는 사회적기업

적정기술의 중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는 빈곤층의 구매력(affordability)에 맞춘 기술이라는 데 있다. 사회적기업을 통한 혁신도 유통 방식의 개선을 통해 빈곤층이 부담할 수 있는 가격에 기술을 보급하는 데 초점이 맞춰진다. 그러나 적정기술을 보급하는 사회적기업의 지속가능성을 결정짓는 데는 가격 외에도 특정 적정기술에 대한 현지 빈곤층의 수요(demand-driven) 및 구매의사 (willingness to pay) 등이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어, 에너지 효율형 스토브는 여성의 가사부담, 실내공기오염으로 인한 호흡기 질환 발병률, 가계의 에너지 구입 비용을 줄이는 동시에 환경보전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여러 국제개발기관과 NGO로부터 주목을 받았다. 그러나 1990년대에 실행된 프로그램들은 오히려 개발도상국 빈곤층 여성들로부터 환영받지 못하는 결과에 직면했다. 1990년대 중반 방글라데시에서 실행된 프로그램을 보면,<sup>4)</sup> 당시 농촌인구의 70% 이상을 차지하던 극빈곤층(the poorest of the poor)은 인근 산에 떨어진 나무 잔가지들을 주워 연료 수요를 충당했다. 한편 에너지 효율형 스토브 보급을 주도한 NGO들은 환경보전을 목적으로 빈곤층의 산지 출입을 제한하는 대신 가격 보조를 통해 빈곤층이 구매할 수 있는 가격에 에너지 효율형 스토브를 보급했다. 이는 빈곤층의 입장에서는 이제까지 주워서 쓰던 나무 잔가지를 쓸 수 없는 대신, 스토브에 맞게 규격화된 나무 뿔감을 시장에서 매번 구입해야 함을 의미했다. 결과적으로 이들의 가계 지출 항목에 이전에는 없던 에너지 구입 비용이 새로 생겨야 했고, 나뭇가지를 줍는 노동 부담을 줄일 수 있었지만 이것이 노동 임근의 증가로는 이어지지 못했다. 또 이들 빈곤층은 스토브를 유통하는 소매상이 되기 위한 초기 투자금이나 신용이 없었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으로 인해 늘어난 일자리도 대부분 그보다는 경제적 사정이 좀더 나은 계층(the better off)에 돌아갔다. 요약하면, 이 프로젝트는 가격 보조금을 통해 빈곤층의 구매력에 부응하긴 했지만, 정작 보급하려고한 적정기술에 대한 빈곤층의 구매의사가 없었기 때문에 실패한 것이다.

이와 비교해 1981년 폴 폴락이 설립한 IDE(International Development

Enterprise)나 앞에 언급한 킥스타트(KickStart)와 같이 소규모 농업 관련 적정기술을 오랜 시간 지속적으로 보급해온 단체들을 보면 사회적기업을 통한 적정기술의 성패를 가늠하는 핵심 요소가 가격(affordability)뿐만 아니라 빈곤층의 구매의사(willingness to pay)에 대한 대응에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 빈곤층 ‘고객’은 사회적기업을 통한 적정기술을 ‘구매’ 하는 데 있어 에너지 효율형 스토브처럼 가격 지출을 줄이는데 기여하는 기술보다는, 농기구와 같이 보다 직접적인 소득 증대를 약속하는 기술에 더 많은 기대를 갖는다.

이는 왜 물을 운반하는 원통형 용기인 큐드럼(Q-Drum)이나 휴대용 정수기 라이프스트로우(LifeStraw) 같은 적정기술 제품이 개발도상국 현지에서 사회적기업을 통해 지속적으로 보급되기 어려우며, 주로 해외 원조 및 긴급구호 기관을 통해 보급되고 있는지를 설명한다. 이들 기술은 빈곤층의 노동 부담을 덜어주고 빈곤의 고통을 완화(alleviation)하는 적정기술이지만, 소득을 높여 빈곤을 줄이고(reduction) 생계를 강화하는(livelihood promotion or enhancement) 개발(development) 효과를 직접적으로 가져오지는 않는다.

이는 현재의 적정기술과 사회적기업에 대한 논의에서 보다 정교한 타겟팅 (빈곤층 가운데 누구를 고객으로 삼을 것인가?)이 주요 의제로 다루어져야 함을 뜻한다. 사회적기업을 통한 적정기술 보급은 일반적으로 구매력이 있는 빈곤층을 사업대상으로 하며 기술을 통한 빈곤감소를 목표로 하기 때문에, 구매력을 갖지 못한 극빈곤층(the poorest of the poor)이 이 혜택에서 소외될 우려가 있다. 예를 들어, 킥스타트가 보급하는 머니메이커의 평균 가격은 보조금을 반영하여도 개당 US30\$이며, 이들이 추산하는 5인 기준 한 가족이 빈곤에서 벗어나는 데 필요한 비용은 US 300\$로서 2005년 기준 일인당 하루 평균 US1.25\$ 이하의 소득을 갖는 빈곤층 혹은 그 이하의 소득을 갖는 극빈곤층이 이를 부담하기는 쉽지 않다.<sup>5)</sup> 따라서 사회적기업을 통해 소득증대를 위한 적정기술을 보급을 논의하는 것과 더불어, 원조나 긴급구호 등을 통한 적정기술 보급도 여전히 강조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때는 특정 적정기술의 혜택이 다른 지역개발 및 긴급구호 수단과 비교해 얼마나 효율적이고 효과적인지 평가해야 할 필요가 있다.

### 3.2 적정기술을 보급하는 주민조직 사회적기업

교육, 위생, 상하수도, 의료 등의 기초 서비스를 보급하는 정부의 역량이 낮은 개

발도상국에서는 1970년대부터 커뮤니티 기반의 주민 조직(Village Organizations, VO)이 정부를 보완해 이들 서비스 보급을 위한 사회적 자원을 동원(social mobilization)하는 역할을 맡아왔다. 이를 테면, 전문의료 인력이 부족한 농촌 산간 지역에서는 일정 시간 보건의로 교육을 받은 지역 주민 보건 인력(Community health workers)이 기초 보건의료를 담당하거나, 지역 정부가 상하수도 및 쓰레기 처리 등의 서비스를 공급하지 못하는 지역에서는 지역개발위원회(Village Development Committee) 등이 이를 맡아온 식이다. 이들 주민조직은 1980년대를 거치며 구조조정 등으로 기초 서비스에 대한 공공예산이 축소되면서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주로 국제개발 원조 단체 등의 후원에 의존해왔는데, 최근에는 원조에의 의존을 줄이고 사용자 부담 요금 (user fee) 및 인센티브를 도입하는 등 사회적기업화하는 흐름이 증가하고 있다.<sup>6)</sup>

이 글은 이와 같은 흐름으로부터 주민조직이 운영하는 사회적기업을 통한 적정기술 보급의 가능성에 주목한다. 이는 기존의 주민조직을 통해 기술에 대한 수요에 보다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으며, 적정기술이 지향하는 환경 이슈 등에 대한 사회적 인식 (awareness)을 지역 주민들에게 극대화할 수 있다는 장점도 가진다.

북부 파키스탄 산간 지역인 훈자(Hunza)에 위치한 암마다바드 (Ahmedabad) 마을의 사례는 이러한 가능성을 보여준다.<sup>7)</sup> 이 마을은 1980년대까지만 해도 도로, 전력, 교육 및 보건 시설 등을 갖추지 못한 오지였는데, 1982년부터 Aga Khan Foundation(AKF)가 지역 개발 프로젝트(the Aga Khan Rural Support Programme, AKPSP)를 통해 주민조직 사업을 시작하면서 이와 같은 상황이 개선되기 시작했다. 주민조직은 상업적 수익 모델(commercial based) 아래서 운영되었는데, 1980년대에는 소규모 저축 (Micro-saving) 사업을 통한 수익금으로 농업 관개 시설 등을 확충하는 사업을 하다가 1990년대부터는 정부의 기술 지원을 받아 지역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소규모 수력 발전(Micro-hydro)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특히, 2007년부터는 그간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350 킬로와트(kilowatts)급의 소규모 수력 발전 시설을 짓고 Faizabad나 Altit 등 인근 지역에 전력을 판매하는 데로 사업을 확장하여, 매월 US1250\$ 이상의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 이 사업은 주민조직인 지역개발위원회를 통해 관리되며, 수익금의 사용도 지역개발위원회에서의 투표 등을 거쳐 보건, 교육 등의 지역개발 프로젝트 등에 쓰여진다. 앞으로 이 마을의 주민조직은 AKF의 지원을 통해 유엔의 청정개발체제(Clean Development Mechanism, CDM) 아래에서 탄소 저



감 등을 통한 추가 이익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그간의 기술 개발로 쌓인 노하우를 바탕으로 인근 지역의 소규모 수력 발전 프로젝트를 자문하거나 프랜차이즈 하는 식으로 추가 소득을 창출할 계획이다.

이와 같은 주민조직 사회적기업을 통한 적정기술 보급은 교육, 의료 등 기초서비스에 대한 정부의 서비스 공급 역량이 부족한 지역의 수요에 대응하면서도, 여전히 공공 서비스에 대한 의사결정권 등의 거버넌스 요소를 지역주민으로 구성된 개발위원회 아래에 둘 수 있다는 점에서 사용자 부담 요금 등으로 대표되는 비즈니스 접근으로부터 이들 서비스의 공공성을 일정 부분 유지할 수 있는 장치로 보인다. 이에 대해 국내의 적정기술 관련 재단 및 사업들은 Aga Khan Foundation (AKF)과 같이 주민조직의 기술 역량 강화 및 운영 비용을 지원하는 촉매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를 통해 지역 커뮤니티와의 관계를 강화함으로써 적정기술 프로그램이 개별적인 기술 이전 사업으로 진행되기보다 기존의 지역개발 사업과 보다 긴밀하게 연계되도록 하는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3.3 소규모 비즈니스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적정기술을 보급하는 사회적기업

적정기술은 개발도상국 성장과 발전의 기본 단위인 소규모 비즈니스(MSEs)의 발전을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으며, 이는 사회적기업 방식을 통해 더욱 활발하게 보급될 수 있다.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개발도상국에서의 소규모 비즈니스는 미약한 시장 통합, 낮은 금융 접근성, 불충분한 전력, 도로 등의 기반 시설 등의 제약(constraints)에 직면해있는데, 태양광 에너지, 정보통신(ICTs), 저비용 운송수단 등의 적정기술은 이와 같은 제약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된다.

대표적으로 마이크로파이낸스를 통한 금융 서비스에의 접근을 높이는 것은 소규모 비즈니스 발전 및 빈곤층의 생계 강화를 위한 핵심적 요건이 된다. 이에 마이크로파이낸스 전문 연구기관인 CGAP(Consultative Group to Assist Poor)는 기술 지원을 사업 영역으로 두고 빌앤멜린다게이츠 재단(Bill & Melinda Gates Foundation) 및 영국 정부 국제개발부(UK Department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DFID)와 함께 개발도상국의 마이크로파이낸스 기관들(MFIs)에 ICT(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y) 솔루션을 보급하는 사업을 시작하여, 2011년 현재 캄보디아, 케냐, 몽골, 파키스탄 등 국가에서 14개의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sup>8)</sup> 특히, 이 단체는 마이크로파이낸스 기관들이 활동하기 어려운 산간 농촌 지역에 폰뱅킹 등

의 기술을 지원하여 은행 지점이 없이도 금융 서비스 (branchless banking)를 공급하도록 주력하여, 빈곤층에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용을 38% 이상 줄이는 데 기여했다. 이와 같은 모델은 외부 원조 기관뿐 아니라 개발도상국 빈곤 지역 현지에서 사회적기업 방식으로도 운영될 수 있다. 네팔 현지의 ICT 솔루션 업체인 Magnus Consulting Group<sup>9)</sup>은 산악 지형으로 인해 금융 서비스 제공 비용이 높은 현지의 마이크로파이낸스기관을 대상으로 기술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이들 지점에 태양광 시설 및 태양열 전지, 저가형 휴대폰 등을 이용한 컴퓨터 시스템을 제공하고 이를 통해 회계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지원함으로써 금융 기관의 인건비를 절감하고 사업 지속성을 높이는 데 기여한다.

한편 소규모 비즈니스 발전을 촉진하는 적정기술은 마이크로파이낸스 분야뿐만 아니라, 농업 분야 등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저가용 라디오 보급을 통한 농산물 시장 가격 정보의 제공, 현지 사정에 맞춰 고안된 농산물 가공 시설을 통한 소득 증대 지원 등은 이미 커다란 주목을 받는 지원책이다. 특히, 이와 같은 적정기술을 가장 필요로 하는 곳이 소득 증대 및 이익창출을 목표로 하는 현지의 소규모 사업체란 점에서 관련 적정기술을 사회적기업 혹은 비즈니스 방식을 통해 공급하는 모델의 지속가능성이 높다고 하겠다.

국내의 적정기술 관련 재단 및 프로젝트는 사회적기업 방식을 통해 적정기술의 보급을 확산하는 데 있어, 개인 수혜자뿐 아니라 빈곤층이 운영하는 현지의 소규모 기업체, 협동조합 등을 지원하거나, 혹은 그와 같은 단체를 돕은 현지의 자문 및 역량강화 교육 기관을 지원하는 방향을 고려할 수 있다. 특히, 이는 적정기술 프로그램이 기존의 지역 개발 및 빈곤층 생계 강화(livelihood enhancement) 프로그램과 통합되는 길을 열어준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 4. 나가며

이 글은 적정기술 및 이를 보급하는 사회적기업에 대한 최근의 관심이 글로벌 빈곤 이슈에 대응하는 해외 사회적 기업의 성공 사례를 단편적으로 소개하는 데 그치고 있으며, 이를 빈곤 완화 및 감소, 사회적 소외 및 불평등의 완화를 목표로 하는 국제 개발 (International Development) 의 맥락에서 이해하려는 노력은 부족한 실정이라는 문제제기를 바탕으로, 현재 진행중인 국제개발협력 노력과 적정기술 사회적기업이 함께 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하고자 했다. 적정기술을 보급하는 사회적기업은 (1) 빈곤

층의 소득 증대를 돕은 기술을 제시할 때 (2) 빈곤층이 중심이 되는 주민조직을 통해 사업이 이루어질 때, 마지막으로 (3) 개발도상국의 소규모 비즈니스 발전을 촉진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때 그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고, 빈곤 완화 및 감소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서는 개발도상국 빈곤의 다양한 성격 및 현지의 사정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가 요구되며, 국내의 적정기술 관련 운동을 기존의 국제개발협력 프로그램과 유기적으로 연계하려는 노력이 우선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 1) 연구 논문 목록 확인을 위해 다음의 웹사이트를 참조.  
[http://lids.ids.ac.uk/cf/guidescf/search\\_energy.cfm?search=fuelwood](http://lids.ids.ac.uk/cf/guidescf/search_energy.cfm?search=fuelwood)
  - 2) Mathew Bishop and Michael Green, 'Philanthrocapitalism: How the Rich Can Save the World', Bloomsbury Press, 2008
  - 3) 이 개념을 제시한 대표 저작으로는 다음의 도서를 참조. C.K. Prahalad, 'The Fortune at the Bottom of the Pyramid: Eradicating Poverty Through Profits', Wharton School Publishing, 2004. 한국어판은 <저소득층 시장을 공략하라>, 럭스미디어, 2006
  - 4) M. Mannan, 'Women targeted and women negated: An aspect of the environmental movement on Bangladesh', *Development in Practice*, 6(2), pp. 113-120, 1996.
  - 5) 킥스타드에 대해서는 다음의 웹사이트를 참조. <http://www.kickstart.org>
  - 6) M. Uddin, M. Ahmed, and N. Khan, "Provision of basic services in the Hunza Valley: Transformation from social mobilization to social entrepreneurship", *Enterprise Development and Micrifinance*, 21 (3), pp. 216-228, 2010.
  - 7) 위의 논문 참조
  - 8) CGAP (Consultative Group to Assist Poor)의 활동에 대해서는 다음의 웹사이트를 참조.  
<http://www.cgap.org/p/site/ctech/>
  - 9) Magnus Consulting Group 의 사업에 대해서는 다음의 웹사이트를 참조. <http://www.magnus.com.np/aboutus.php>